

흔들리는 식량안보, 자급률 OECD 최하위

통일미 비축·유럽식 축산제도 도입... 식량정책 전환 시급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식량안보지수가 최하위다. 이러한 현실에 비해 우리의 식량안보 의식은 실로 걱정스러운 수준에 있다. 사진은 강원도 춘천시에서 농민들이 벼 수확에 바쁜 일손을 놀리는 모습.

지난해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이라는 책을 펴냈다. 세계 어디를 다녀 봐도 힘 있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식량을 자급하고 있다. 물론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식량자급이 자기 영토 안에서 생산한 것만으로 먹고산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주식으로 사용하는 쌀,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을 필요한 수준으로 생산하고 전체 식량 에너지로 볼 때 충분한 양을 스스로 생산하는 것을 식량 자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농업정책은 농가소득 향상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 농민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현실에서 농가소득 향상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농가소득 향상과 아울러 식량자급률 제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1980년대에 달성한 쌀 자급의 성취감에 취해 아직도 식량이 남아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의 식량섭취 에너지 중 쌀의 기여도는 2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쌀 수급을 식량자급의 지표로 믿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이고 캐나다, 호주, 프랑스는 곡물 자급률이 180%에 달하는 주요 곡물 수출국이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서유럽 국가들은 모두 식량을 자급하는 나라들이다. 선진국 중 예외적으로 일본은 우리와 같이 곡물 자급률이 3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일본은 해외 농장과 국제 곡물 유통망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어 스스로 곡물을 구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식량자주율(food sovereignty)이 100%를 넘는 나라이다.

식량안보 의식 실로 걱정스러운 수준

하지만 한국은 곡물 자급률 25% 수준, 식량에너지 자급률 50% 이하, 식량자급률과 식량자주율이 같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식량안보지수가 최하위인 나라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해 우리의 식량안보 의식은 실로 걱정스러운 수준에 있다.

우리의 농업정책은 농가소득 향상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수출드라이브 위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농민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농가소득 향상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농가소득 향상과 아울러 식량자급률 제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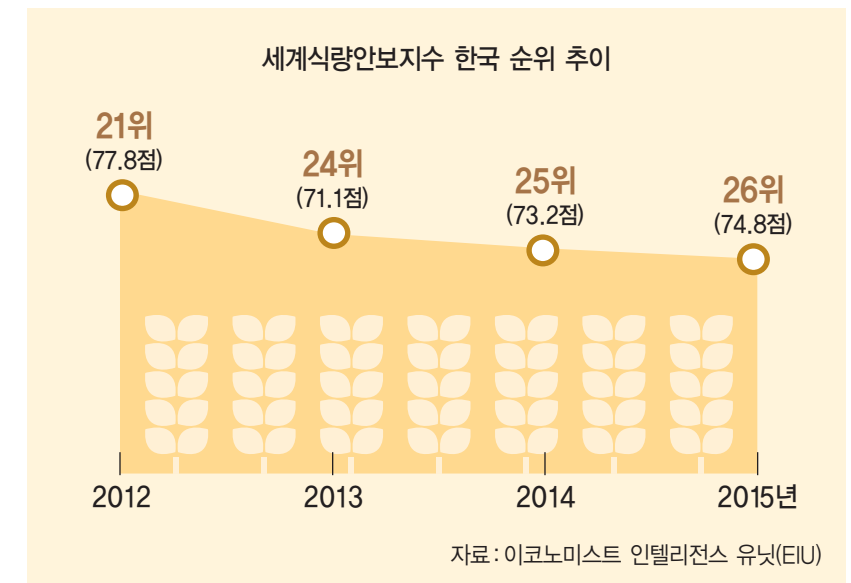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는 1980년대에 달성한 쌀 자급의 성취감에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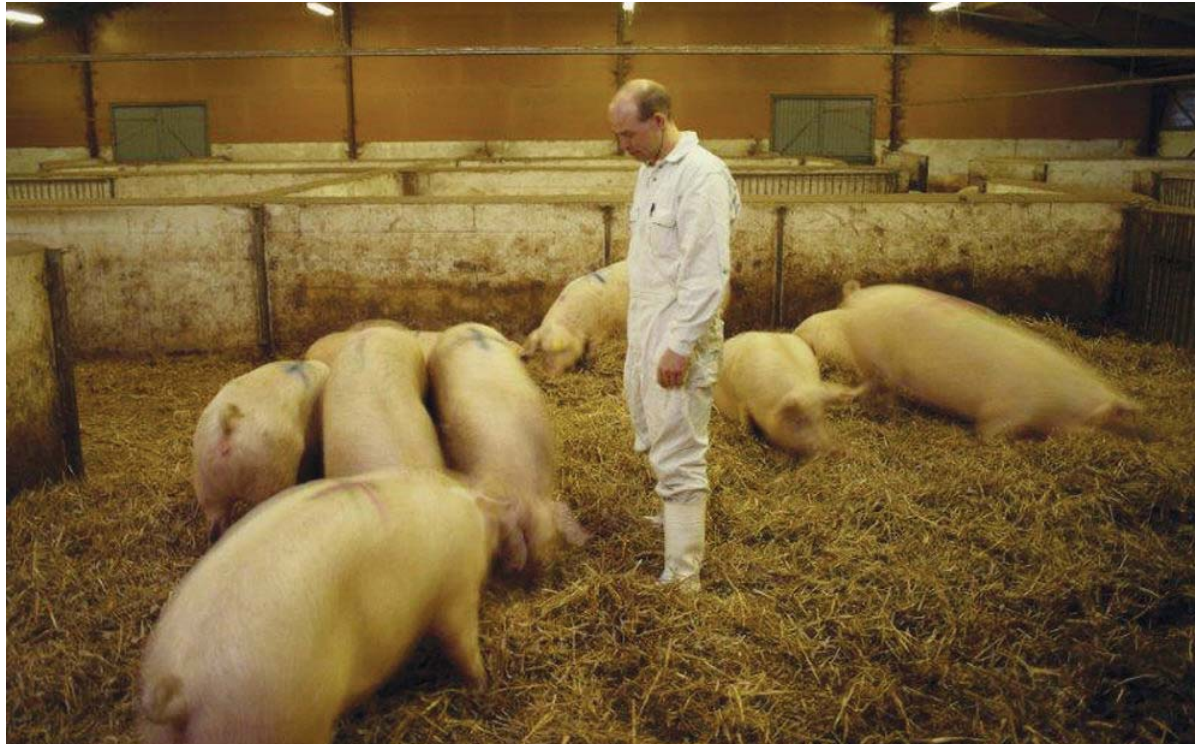
해 아직도 식량이 남아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의 식량섭취 에너지 중 쌀의 기여도는 2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쌀 수급을 식량자급의 지표로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연간 450만톤 수준이지만 밀 400만톤의 거의 전량, 옥수수 800만톤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콩은 연간 120만톤을 수입하는데 국내 생산량은 12만톤에 불과하다. 수입한 곡물은 대부분 축산 사료로 사용돼 고기와 유제품으로 우리의 밥상에 오른다.

이들 밀가루 제품과 동물성 식품에 밀려 쌀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식탁은 수입식량으로 차려지고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이미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섰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세계 식량생산이 감소하고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민족주의가





유럽의 축산업 허가제는 소유하고 있는 농토의 크기에 따라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마릿수가 결정된다. 사료의 자급과 축산 오물을 방류하지 않고 자기 농토에 모두 환원하도록 사육두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사진은 덴마크의 돼지 농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업정책은 구태의연하기만 하다.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 보이지만 우리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는 식량자급률에 관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통일미 120만톤 비축 입법화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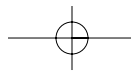
우리 농민의 주 수입원은 쌀농사이므로 쌀의 생산을 늘리고 수요를 확대하는 일이 농정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 보고서에서 쌀의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식량난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미 120만톤을 항상 비축하는 제도를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매년 60만톤의 쌀을 2년간 비축했다가 가공용 쌀로 방출하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 주민에게는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고 국내 쌀농사를 지탱하며 쌀 가공식품산업을 활성화

화해 쌀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추가예산은 4844억원으로 추산되며(2013년 기준) 우리나라 외교통일예산의 12%에 해당한다.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에게 즉각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려면 먼저 남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제도가 구축돼야 한다. 전 국민의 7%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매달 1인당 20kg의 쌀 또는 쌀 가공식품(즉석밥, 떡, 쌀국수 등)을 살 수 있는 쌀쿠폰을 지원해 진정한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 예산은 8106억원으로 추산되며(2013년 기준)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0.8%에 불과한 금액이다.

통일미 120만톤의 항시 비축과 통일이 되면 즉시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쌀쿠폰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강력한 통일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로써 80만 헥타르로 급격하게 줄어든 쌀 재배 면적을 96만 헥타르로 다시 늘리고, 연간 480만톤의 쌀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의 수익성은 점점 떨어지고 농업 전 분야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거침없이 내려가는 것을 방관하던 정부가 여론에 밀려 2011년 7월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2015년까지 25%이던 것을 30%로 올리겠다고 상향 조정했으나 아무런 세부계획이 없이 발표한 공약이었다. 식량안보를 염두에 둔 식량정책의 일대 전환이 없다면 우리는 세계가 걱정하는 대로 앞으로 닥칠 세계 식량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되고 생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밥 한 그릇에 콩으로 만든 반찬(된장찌개, 두부, 콩나물)이 있으면 영양적으로 우수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쌀의 자급 못지 않게 식용콩의 자급도 대단히 중요하다. 연간 필요한 식용콩은 40만톤이나 국내 생산은 12만톤에 불과해 자급률이 30% 수준이다.

콩의 생산량을 늘리려면 저율관세(TRQ)로 들어오는 수입콩의 가격(1020원/kg)과 국산콩 가격(5500원/kg, 2013년 기준) 차이를 줄이고 TRQ 물량을 할당받는 가공업체에 국산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가 마련되면 식용콩의 자급률을 당장 60%로 올릴 수 있고, 통일이 되면 북한의 옥수수밭을 콩밭으로 전환하여 콩의 완전 자급을 이룰 수 있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은 사료 곡물의 수입에 있다. 사료용 곡물의 자급률은 3% 미만이다. 조사료 자급률도 80% 수준이다. 사료용 풀까지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모작이 가능한 80만 헥타르의 논을 대부분 놀리고 있으며 생산 가능면적의 17%에만 겨울에 밀, 보리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유럽식 축산업 허가제 도입 필요

유럽의 축산업 허가제는 소유하고 있는 농토의 크기에 따라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마릿수가 결정된다. 사료의 자급과 축산 오물을 방류하지 않고 자기 농토에 모두 환원하도록 사육두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 법으로 유럽은 식량을 자급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하루 속히 유럽의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에 맞게 사료의 10~20%라도 자가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당장 10% 이

상 올라가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식량안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의 수익성은 점점 떨어지고 농업 전 분야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거침없이 내려가는 것을 방관하던 정부가 여론에 밀려 2011년 7월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2015년까지 25%이던 것을 30%로 올리겠다고 상향 조정했으나 아무런 세부계획이 없이 발표한 공약이었다. 곡물자급률은 계속 하락해 22%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작년에는 23% 수준에 머물렀다.

식량안보를 염두에 둔 식량정책의 일대 전환이 없다면 우리는 세계가 걱정하는 대로 앞으로 닥칠 세계 식량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되고 생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그러나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식량안보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놓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통일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나라로서, 또한 기아선상에서 해매는 북한 동포를 끌어안아야 하는 나라로서 아주 특별한 식량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미 120만톤 항시 비축제도, 저소득층 쌀쿠폰 무상지원제도, 수입콩 TRQ물량 할당제도를 활용한 콩 증산정책, 유럽식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의한 사료작물 생산 의무화제도 등을 과감히 시행한다면 우리도 4~5년 내에 식량자급률 60%, 쌀의 완전 자급, 식용콩의 50% 이상 자급, 조사료 완전자급을 달성하여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는 식량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다. 자유마당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재단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

